(사)한국생활용품 소상공인협회 BPDA

세계타임즈

세계타임즈몰

☎ 대표전화 : 1661-8385 www.thesegye.com 2026년 2월 11일 수요일 〈제 3310호〉

이재명 대통령 "국회 위증 고발사건 너무 적체돼"신속히 가려줘야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10

李대통령 "현재 같은 입법속도론 국제사회 변화에 대처 어려워"

명백한 거짓말·이유 없이 불출석은 국회 권위 무시

"李대통령 "국민이 오염되는 상황…마약문제에 역량 최대한 투입"

'쿠팡 수사무마 의혹' 엄희준 위증고발 겨냥 해석도…靑 "특정사건 염두 안둬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회 위증 고발 사건에 대해선 진실인지 허위인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신속히 가려줘야 국회가 국회로 역할을 하는 데 도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 위증 고발사건들이 너무 적체되고 있는 것 같다. 각별히 챙겨봐 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사 결정을 할 때 진실과 팩트를 발굴하기 위한 각종 행위를 한다"며 "예를 들면 청문회든 국정조사 등의 활동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최근 국회의 권위가 훼손될 만큼 명백한 거짓말을 하거나 이유도 없이 출석을 안 해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게 너무 많다"며 "이건 여에 유리하든 야에 유리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가의 핵심기구로서, 헌정 질서를 구성하는 핵심 기구로서의 국회의 권능과 권위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 건 등을 신속히 수사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냐는 해석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엄 검사는 작년 9월 22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및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쿠팡 무혐의 지시' 의혹에 대해 허위 증언을 했다는 사유로 고발됐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이날 언급과 관련해 "해석은 언론에서 붙일 수 있겠지만, 대통령의 발언은 총론적 이야기이고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총론적 이야기'는 허위 정보의 위험성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주의는 국가 간 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됐고 민주적 역량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결판나는 시대가 왔다"며 "민주주의에서는 팩트가 중요하다.

가짜 정보가 주어지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어렵고 결국 주권자들의 주권 행사에 왜곡을 가져온다"고 말했다.

"언론도 정론 직필이 본질적 기능이고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입법·행정·사법에 이은 제4부로 평가된다"며 "인정과 보호를 받고 그에 따른 혜택을 누리고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허위 정보는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의사결정을 왜곡해 민주주의 시스템을 훼손한다"며 "허위 정보에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은 민주주의 역량 유지·발전에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마약 문제는 국민이 병드는 문제이자 지하 경제 문제"라며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서 (단속)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내 마약 확산의 실태와 단속 상황을 물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요새는 여행자만이 아니라 컨테이너나 배를 타고 싣고 오다가 제주 해안에 떨어뜨려서 떠내려오게 하는 등 희한한 (운송) 방법을 쓰고 있더라"며 구체적 실태 등을 상세히 물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전에 우편 집중국에 인력을 확보해 우편물을 검색하라고 한 건 어떻게 됐느냐. 몇 군데에 몇 명이 나가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관세청장이 22개 우편 집중국 중 5곳을 2월 3일 자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지정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아직은 실제로 착수를 못 한 것 같다"며 "다섯 군데만 할 게 아니라, 행안부도 인력을 빨리 배치해 주고, 예산도 빨리 챙겨달라"고 했다."국민들이 오염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속도를 좀 더 내 달라"고 촉구했다.

마약 검사를 안 받고 버틴 경찰 간부가 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단속 업무 등으로 접촉면이 있어서 노출 위험이 있는 공무원들은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조심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합법적으로 마약을 많이 취급하는 민간인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인권 침해라고 할 수도 있긴 한데, 한번 검토해 보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은 해외 인력을 조선산업 현장에 투입하는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를 예시로 언급하며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다가 최저임금으로 국내 일자리를 대체하고, 지역 경제도 나빠지고, 이러면 성장의 과실은 상층 일부가 독식하고 아래는 더 어려워진다.

이러면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나아가 "정규직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하고 재취업 가능성이 없으니 해고되면 죽음이라 악착같이 (자리를) 지키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한 번 정규직을 뽑아놓으면 불황이어도 내보낼 수 없으니 다시는 안 뽑는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만둬도 불안하지 않게 비정규직 보수가 오히려 많아야 하고, 안전망이 확충돼야 한다.

그건 돈이 들기에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이를 대화해서 타협해야 하는데 신뢰가 없으니 믿지 못한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노조 조직 형태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며 "산업별 노조로 가야 하고 임금 교섭도 산업 단위로 광범위하게 가 줘야 사회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과정에서 "흘러간 과거의 유행가 같은 거지만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이상에 관한 것이고. 임금 교섭도 광범위하게 해줘야 사회가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때론 사소하게 보일 수 있는 다양한 이슈를 직접 제시하는 배경에 대해 "우리 사회에 비합리적 요소가 많아 고쳐나가야 하는데, 큰 덩어리 한 개가 아니라 작은 것들이 먼지처럼 쌓여 있다"며 "이걸 한 개씩 언제 집어내냐 (하겠지만) 그래도 집어내야 한다.

안 집어내면 바뀌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 방에 혁명적으로, 그런 게 어디 있느냐"며 "개혁이란 것도 자그마한 노력이 무수히 쌓여서 가능한 것이지, 획기적인 조치 한두 개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기회가 많지 않다. 제가 잠을 설치는 이유가 그런 것"이라며 "임기 초의 한 시간과 중·후반의 1시간의 가치는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채봉 기자

국토위, '공공정비사업 용적률 1.3배 상향' 與 주도 통과

9·7 대책 후속입법…국토장관 토허구역 지정 권한 확대 법안도

국힘 "막무가내로 위원회 운영" 반발…민주 "찬반의견 충분히 오갔다

공공재건축·재개발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상향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10일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국토교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공공재개발의 최대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 기준 법적 상한의 1.2배인 360%, 공공재건축은 1.0배인 300% 수준이다.

개정안은 이를 각각 최대 390%까지 늘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민간 정비사업은 제외해 상대적으로 공공 정비사업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취지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9·7 공급대책의 후속 입법 과제로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으로 꼽힌다.

하지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지연되자 해당 법안은 소위 의결 없이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또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 신고법 개정안'도 소위 의결 없이 회부돼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현행법상 국토부 장관은 2개 이상 시도 관할 구역에 걸친 지역에 대해서만 토허구역을 지정할 권한을 가지지만 개정안에는 이를 서울 등 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여야를 떠나서 행정부의 자의적인 행정권 남용에 대해서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최소한 소위에서 소소위 결과를 받아보고 토론한 뒤 전체회의로 회부해야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면 앞으로 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고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그동안 몇 차례 소위가 열릴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지만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제는 결단을 내릴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며 "그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전임 간사와 소통했고 찬반 의견은 충분히 오갔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토위는 이날 서울 지하철 5호선 납품 지연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와 경기도, 한국철도공사, 국토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납품을 지연시킨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의 박선순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은 김건희 특검의 공식 요청에 따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고발을 의결했다.

진정화 기자